

#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24호 / 10월 22일

## 소득분배정책과 경제구조조정<sup>1</sup>

### 1. 개요

- 최근 중국 지도부는 ‘세가지 대표(三個代表)’의 중요한 사상을 바탕으로 주요 역량과 업무 중점을 경제의 구조조정에 두고 소득분배 차원에서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.

### 2. 중국의 몇 가지 경제구조적 문제

-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전환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경제구조적 문제 심화 야기
  - 1990년대 이후 정세변화에 근거하여 정확한 소득분배정책방향의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투자율의 과도한 상승, 1,2,3차 산업구조의 역전, 도농주민간 소득격차 확대 및 주민소득과 경제성장간 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출

현하였음.

□ 거시경제 차원에서 볼 때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합리성은 과도하게 높은 투자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.

-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인 1980~90년대에 투자율은 35~40% 수준이었으며 주로 40% 수준에 근접하였음.

- 90년대 후반 소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율은 더 한층 높아지게 되었음.

- 최근의 투자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연간 투자율이 45%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□ 장기적으로 과도한 투자율은 3차산업이 2차산업에 비해 낙후되는 산업구조상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됨.

- 1990년대 10년동안 GDP에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.1%에서 50.2%로 증가하였으나 3차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지 못함.

- 경기과열이 극심하였던 1993~94년 기간동안 2차산업은 연간 20%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3차산업은 10% 정도에 불과

- 상당기간 동안 3차산업의 성장이 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안정성 및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
  - 3차산업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은 취업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.
    - 중국에서 신규 취업인구의 85%가 3차산업에서 창출
  -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3차산업 성장의 가속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.
- 미시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제구조적 문제가 발생
-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도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농촌경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음.
    - 농촌경제 발전에 사용된 국채발행자금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, 정책방향에서도 중국경제의 이분적인 구조를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임.
  -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, 특히 농촌소득의 성장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경제구조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도 유발될 수 있음.

□ 주민소득(居民所得)이 경제성장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낮음.

- 도농주민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든지, 아니면 합산하여 계산하든지 주민소득의 성장속도가 경제성장에 비하여 모두 낮으며 양자간 격차도 확대 추세 시현

### 3. 향후 소득분배정책의 방향

□ 16대에서 분배체제의 개혁 심화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음.

□ 현재 국유기업 개혁이 철저하게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업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특히 중등소득계층의 소득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□ 농업부문의 생산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농민을 단순한 농업생산으로부터 탈피하게 함. 동시에 국채자금 중 농촌지역 건설에 사용되는 비율을 증가시켜, 농촌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강화

- 이것은 총인구의 2/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주민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도농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여 사회·정치적 안정 유지에 기여

□ 사회적 약자인 정리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마련하고, 그들의 소득이 보장되는

기회를 제공하도록 각급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임.

- 국가공무원의 소득은 경제성장 속도에 근거하여 인상함으로써 각 부문의 소득 수준제고의 모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.
-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지역 및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기준을 제정, 추진하여야 할 것임.
- 또한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금납부를 철저히 감독·관리하여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유지. (\*\*\*)

---

<sup>1</sup> 본 자료는 2004년 9월 13일에 KIEP가 북경에서 개최한 “한중일 FTA 및 중국경제 향후 발전 전망”에 관한 세미나에서 中國社會科學院 數量經濟與技術經濟研究所 汪同三 소장의 발표문 《收入分配政策與經濟構造調整》을 요약, 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. 참고로 “중국경제현 안브리핑” 자료는 KIEP 북경사무소에서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, 지난 자료는 <http://www.kiep.go.kr/cres/cres.nsf> 혹은 <http://csf.kiep.go.kr>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밖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창배([cbseo@kiep.go.kr](mailto:cbseo@kiep.go.kr)) 연구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